

♣ '녹색 GDP' 단계적 도입

환경요인을 반영해 국민총생산을 산출하는 '녹색 GDP'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 올해에만 100억원의 투자기금을 조성, 유망 환경벤처기업인 일명 '스타(Star) 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등 환경산업(ET)에 대한 지원 방안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은 지난 2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기 위한 '에코-2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 보전 등 환경요인을 반영한 녹색 GDP가 도입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산업부문별 환경투자의 효율성 증진에 적극 활용된다.

또 환경피해 및 환경개선의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해 환경과 경제의 상호보완관 계를 정립하고, 환경친화적인 경제개발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환경·경제 통합지표'가 개발된다. 이 지표가 개발되면 수질·대기오염도 1ppm을 개선하는데 따른 경제적 가치를 산출, 환경개선 투자효과를 미리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환경산업을 정보산업(IT), 생명산업(BT)과 함께 주요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오는 2010년까지 환경산업의 선진국 수준 도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54개의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100억원 규모의 투자기금을 조성, 유망 환경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환경기술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해 경영기법을 전수하고 선진기술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올해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 사업에도

환경요인을 반영해 국민총생산을 산출하는 녹색 GDP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 올해에만 100억원의 투자기금을 조성, 유망 환경벤처기업인 일명 스타(Star) 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등 환경산업(ET)에 대한 지원방안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500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5월 중국 베이징(北京)에 처음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상설전시관을 설치하는 한편 민·관 공동의 '환경산업 수출협력단'을 구성, 수출 유망국가에 파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자원절약 및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재활용산업 자금지원 한도를 6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정부와 민간단체, 업계 등이 공동으로 고철과 폐지 등 폐자원을 집중수거해 재활용하는 '전국폐자원 수집처리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사범을 예방하고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업소담당제 및 단속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업소담당제가 실시되면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업소의 지도단속 담당자는 연대책임을 지게된다. 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차원에서 외부인사들로 이뤄지는 '기관 장후보평가위원회'도 구성된다. 환경부는 이밖에 ▲기업합경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여신 우대 ▲중수도, 절수기 설치 등을 담당하는 물절약투자대행업(WASCO)

제도 도입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따라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녹색카드 갖기 운동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강변여과수 본격 개발 ▲국도를 통합하는 자연생태네트워크 구축 등도 추진키로 했다.

♣ 통합영향평가 의견상충시 환경부장관이 조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환경·교통·재해 등 통합영향평가서 작성과정에서 관계부처간 협의의견이 상충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환경부는 통합영향평가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평가서 작성과정에서 관계부처간의 잦은 충돌이 예상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권을 환경부장관이 갖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지난 1월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분야별 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이 상충할 경우 관계부처장관이 추천한 전문가 및 관계부처 담당 과장들로 구성된 '영향평가조정협의회(위원장: 환경부 환경정책국장)'를 통해 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 수도권 대기오염 측정망 10월 개통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를 연결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이 오는 10월 개통된다.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3개 도시는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 개선과 각종 오염발생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광역실무사업을 확정, 대기오염측정망 TMS(원격자동측정시스템)구축과 2002년 월드컵 기간 오존 감소대책 등이 추진된다.

3개 지자체는 모두 3억5,000여만원을 들여 오는 10월까지 현재 수도권에 설치된 76개 대기오염 측정망을 자동연결해 대기오염발생에

공동대처기로 했다. 또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 5월부터 한달간 430여만대에 이르는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 홀짝제 운행을 실시하고 수도권내 29개 소각시설과 26개 발전 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키로 했다. 3개 지자체는 사전연습 차원에서 월드컵 개막 1년전인 오는 5월부터 한달간 수도권 오존상황실을 공동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 30곳 상수도시설 확충

환경부는 상수도 보급률이 열악한 농어촌·도서지역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올해 총 2천 632억원을 들여 경남 남해, 충남 아산등 전국 30개 지역에 상수도 보급시설을 신규 건설키로 했다.

지난 1월 16일 환경부가 마련한 2001년 지방상수도 보급계획에 따르면 짧은 가뭄에도 제한급수를 매년 반복하고 있는 농어촌·도서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 경남 남해, 충남 아산등 전국 30개 지역에 취·정수장, 송·배수관로 등 상수도시설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국고 1천313억원 등 총 2천632억원의 사업예산을 편성, 지자체별 자금배정을 완료했으며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위해 1/4분기중 사업물량을 모두 집행키로 했다.

♣ 방류수 재활용 예산절감 앞장

충주시 수질환경사업소(소장 한용식)가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기계냉각수를 재활용해 처리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 수돗물을 이용해 기계냉각 및 하수처리를 해왔으나 지난해 7월부터 냉각수와 잡용수, 세척수 등 그대로 방류되는 방류수를 재활용해 처리예산을 크게 줄이는 등 예산절감

충주시 수질환경사업소(소장 한용식)가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기계냉각수를 재활용해 처리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 수돗물을 이용해 기계냉각 및 하수처리를 해왔으나 지난해 7월부터 냉각수와 잡용수, 세척수 등 그대로 방류되는 방류수를 재활용해 처리예산을 크게 줄이는 등 예산절감에 앞장서고 있다.

에 앞장서고 있다.

사업소는 지난해 7월부터 표준활성 슬러지법으로 처리하는 봉방동 중추하수처리장에 일일 500m³를 처리할 수 있는 방류수 여과기공사를 완료하고 재활용에 나서 연간 6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또 지난 99년 5월에 착공한 중추하수종말처리장 시설 2단계 증설공사가 오는 2002년 5월 준공되면 일일 2만 500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연간 1억 1000만원원의 수도요금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중추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는 양여금 143억2000만원, 물관리 기금 64억8400만원, 도비 31억7000만원, 시비 31억8000만원 등 모두 270억1900만원을 들여 찾집관거 11.4km와 중계펌프장 1개소 등을 설치한다.

♣ 환경부, '생물자원보전관' 건립 추진

국내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립 생물자원보전관'이 처음으로 건립된다. 환경부는 최근 생물자원 및 종 보전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국내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연구를 위한 생물자원보전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평균 수백개의 생물표본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사한 시설조차 없어 생물표본을 서울대와 강원대 등 일부 대학 및 연구소에 위탁,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생물자원보전관 건립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 환경채널, 환경TV 개국

환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케이블TV '환경TV'가 지난 2월 12일 개국했다.

다큐멘터리 전문채널 CTN(ch29)의 자매채널인 '환경TV'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하루 17시간씩 방송한다.

개국특집으로는 국내외 대기 및 수질 오염 사례를 집중 점검한 '환경백서'와 몽고 정부의 개발정책 추진에 따른 후유증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몽고의 생태계 파괴실태 등을 다룬 '그린스페이스', 국내 최대의 간척 사업인 새만금 간척을 둘러싼 환경 논쟁을 살펴보는 '절망하는 새만금'등을 마련했다.

또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200여개 환경단체들을 찾아가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는 '제3의 힘, 환경NGO',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생활오염 예방법 등을 들어보는 강화 형식의 '환경 아카데미', 아시아와 유럽, 남미, 중미 등 전세계 환경과 사례 고발과 극복 과정을 담은 20부작 '생명시대' 등 자체 제작물 9편이 정규 방송된다.

이밖에 해외물로는 일본 NHK와 캐나다 TV 온타리오(Ontario)가 공동제작한 자연과 동물의 세계를 담은 40부작 '세계의 자연기행', 지구의 생성과 구조, 대륙의 변화 등 지구 내·외면에서 생기는 모든 변화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지구를 분석한다' 등 7편이

앞으로 환경오염 행위나 야생조수의 밀렵 및 밀거래 등을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영산강환경관리청은 최근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오염 감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편성표에 올라있다.

♣ 환경오염업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앞으로 환경오염 행위나 야생조수의 밀렵 및 밀거래 등을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영산강환경관리청은 최근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오염 감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이에 따라 지난 2월 1일부터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등 각종 오염행위를 신고해 관계 법령에 따라 위반으로 적발되면 신고자에게 2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야생조수의 밀렵 또는 밀거래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10만~2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환경청은 지난해 12월 광주, 전남지역 산업단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50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 오염방지시설을 작동하지 않거나 지정폐기물 기준을 위반한 13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 포천군, 2003년까지 수질오염측정망 설치

경기도 포천군은 오는 2003년까지 14억원을 들여 수질오염 측정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군(郡)에 따르면 수질오염 예방과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수질오염 측정망 설치지점 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1개 지점에 증속분석기, 컴퓨터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2003년까지 포천·영평천에 측정망을 설치하고 각 사업장의 배출오염 물질 성분 및 폐수방류량, 폐수 배출사업장의 일반현황 등을 컴퓨터에 입력해 전산화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측정 검사지점의 수질을 채취, 오염성분을 분석해 배출업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개발사업 환경평가 강화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현장확인 및 용역결과 검토체제를 갖춰 양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31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되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키로 하고 종전의 사전환경성 검토 전문위원회를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환경부는 이날 사전환경성검토 전문위원회를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로 개칭하고 KIST, KDI, 농촌경제연구원, 주택연구소등 관계 전문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규모가 큰 행정계획

이나 민원이 제기된 개발사업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대상사업의 경우 현장확인체계를 강화해 난개발을 방지키로 했으며 특히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담당한 위원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토록 하여 양 제도간의 연계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 본부 및 7개 지방환경청등 8개 기관에서 운영되는 기관별 전문위원회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합동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 광주시 환경시설공단 설립

광주시는 현재 기관·시설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통합관리할 '광주시 환경관리시설공단'(가칭)을 설립키로 했다.

지난 2월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 설립될 이 공단은 현재 도시공사와 민간 등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2개소(광주,송대)와 위생매립장 2개소(운정,광역), 상무쓰레기소각장, 위생처리장 등 6개의 환경기초시설을 모두 맡아 일괄 관리하게 된다.

이 공단은 이사장과 전무이사 밑에 기획경영부, 수질관리부, 환경사업부 등 3개부, 7개팀을 두고 정원 150여명으로 운영되며 대부분의 인력을 고용승계 차원에서 현재 개발시설 근무인력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 환경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책 마련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민자투자 방식의 새로운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고농도 축산폐수 유입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설설치 사업에 민자투자 방식을 도입하고, 처리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지원 하는 인센티브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지난 2월 1일 밝혔다.

영세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가 일선 시·군에 설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축분과 뇨의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시설의 경우 가동률이 30%를 밑돌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설치예정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7개중 1개를 민자투자 방식으로 설치한 뒤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민자투자 방식의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둘 경우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기존 시설에 대한 종합성능 검사를 실시한 뒤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공모 등을 통해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비를 처리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농어촌지역 매립장 13곳 신·증설

환경부는 농어촌지역인 전남 강진, 강원 횡성 등 전국 13곳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올해 391억원을 투입한다고 지난 1월 31일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금년의 경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 행정지도를 통해 상반기안에 시설사업 발주를 마무리짓기로 했으며 농어촌 쓰레기 위생 매립률을 지난 98년 말 87%에서 금년 말까지 100%

로 제고시킬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우선 신규사업의 경우 전남 강진에 5만㎡의 매립장과 330㎡의 재활용시설을 금년말까지 확충하는데 총 65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강원 횡성지역에는 52억원을 들여 시설용량 9만㎡ 규모의 매립시설을 연말까지 건설키로 했다.

또 울릉, 영양, 영덕 등 경북지역 3곳에 3,000~1만4,000㎡ 규모의 매립장과 330㎡의 재활용 처리시설을 각각 확충키로 하고 금년말까지 총 85억5,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쓰레기 처리율이 낮아 지역민원이 많은 경북 의성에 3만㎡ 규모의 매립시설을 추가로 확충키로 하고 사업비 30억원을, 충남 부여와 경남 함안에 1만1,000㎡와 8,000㎡규모의 매립시설을 각각 증설하는데 모두 37억9,000만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 환경기술 현장적용 활발

작년 한 해 동안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환경기술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 등 48개 사업장에서 채택되어 총 1천821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일 환경부가 마련한 환경기술 현장적용실태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총 53건의 환경기술평가 신청이 접수돼 이중 17건이 평가서를 발급받았으며 17건의 기술분야는 국산기술이 12건, 외국기술을 도입해 국내에 적용한 기술이 2건, 기존의 국내기술을 개량한 것이 3건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신기술은 금호산업(주)의 KIDEA하수처리기술, (주)바투환경기술의 오수처리기술 등 총 7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48개 사업장에 적용돼 1천821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

작년 한 해 동안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환경기술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 등 48개 사업장에서 채택되어 총 1천821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 업체별로는 금호산업(주)이 14건 1천81억7천만원의 매출로 활용실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한화과 한화석유화학이 공동 개발한 질소·인 고도처리기술이 5건 588억원, 환경관리시설공사가 2건 98억원, (주)바투 환경기술이 17건 3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공환경기초시설 설치시 환경기술 적용을 제도화했으며 환경기술로 검증 받은 기술에 대해 0.5~1.0점의 가점을 부여토록 지침화한 바 있어 앞으로 환경기술의 활용이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전국 첫 폐각처리공장 오는 7월 가동

굴과 바지락 등 조개 껍질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폐각처리 공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는 7월 전남 보성군에 문을 연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 2일 "보성군 벌교읍 영등리 6천900평 부지에 91억여원을 들여 건립 중인 폐각처리 공장이 오는 7월초 본격 가

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공장 건립은 남해안 지역에 대량 방치돼 해양오염의 주범이 됐던 굴과 바지락, 고막 껍질 등을 처리, 재활용함으로써 자원활용은 물론 해양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 4일부터 본격 시행

제품의 자원사용량과 제조과정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에 이어 시행규칙 등이 정비됨에 따라 4일부터 TV 등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 대상 제품은 TV 외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기청소기, 반도체, 타이어, 세제, 자동차용 범퍼, 도시가스, 유류, 모니터 등 13개이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 단계까지 자연자원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량,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계량화한 뒤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로 기업의 신청을 받아 환경부 지정 인증기관이 인증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제품의 환경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나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지고 제품 수출과정의 비관세 장벽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품의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가표준 환경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과 소비자는 물론 국

제품의 자원사용량과 제조과정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에 이어 시행규칙 등이 정비됨에 따라 4일부터 TV 등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경제와 환경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울산, 악취 조기 감지시스템 설치

악취를 조기에 감지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악취자동감지 경보시스템이 울 하반기부터 울산지역 공단 곳곳에 설치된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 공단내 30곳에 악취자동감지 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지난 2월 밝혔다.

시는 올해 타당성 조사와 외국사례를 조사한 뒤 하반기에 석유화학공단과 여천, 용연공단 안 20곳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내년에는 온산, 미포공단안 10곳에 설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각 사업장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등의 악취를 배출할 경우 즉시 감지해 시정에 설치된 수질, 대기자동 측정망(TMS)에 전달함으로써 악취가 시가지로 확산되기 전에 신속한 대처와 함께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

하고 시와 구·군 직원 10명으로 '악취특별 대책반'을 구성해 가동하는 한편 악취모니터제와 오존경보제 등을 조기 시행기로 했다.

♣ 안산시, 환경오염방지시설 지금 100억원 용자

경기도 안산시는 올해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100억원의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2월 5일 밝혔다.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용자된다.

신청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 또는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중소기업으로, 오는 3월 3일 이후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시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용자승인을 받은 업체가 3개월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거나 타시도로 이전할 경우 용자를 취소하고 대출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 제1회 한·중·일 그린 비즈니스 엑스포 및 제23회 국제환경기술전(INVEX2001) 개최

제1회 한·중·일 그린 비즈니스 엑스포와 23회 국제환경기술전이 함께 오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COEX 태평양관에서 개최된다.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환경보전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지난 2월 한·중·일 3국의 환경장관 회의에서 협의된 환경산업라운드테이블의 일환으로 3국이 각국

별로 3년 주기로 순회하면서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본 및 중국 환경부의 특별후원으로 별도의 일본관 및 중국관이 설치예정인 것으로 있어 전시회를 통한 동북아 환경산업의 교류는 물론 시너지효과로 인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가에서도 높은 참여가 예상된다.

주요 환경선진국의 외국업체와 국내 유수업체 등이 참여하여 각국의 신기술을 선보이고, 그 결과 참여업체의 실질적인 구매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국제환경기술전은 23회를 거치면서 국내외 환경인들의 만남의 자리이자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의 참여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에 매년 열리는 동 전시회는 국내 환경업체의 발전은 물론 국가적으로 환경산업이 환경친화적 방향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낙동강환경관리청은 한정된 단속인력만으로 감시가 어려운 환경오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간에 환경감시기능을 부여한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환경부에서 환경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를 마련, 올해 예산으로 3천400여만원이 확보되면서 본격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낙동강환경관리청은 대기, 수질, 밀렵·밀거래, 폐기물, 유독물, 자연 훼손 등 분야별로 10~30건의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분야마다 300만~900만원의 포상금 예산을 책정했다.

앞으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에게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결유지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지난 2월 9일 밝혔다

♣ 구미시 하수처리 고도시설 8월 착공

경북 구미시는 오는 8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시작한다.

지난 2월 8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97년 이후 추진해 온 총사업비 500억원의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을 오는 8월 착공해 2004년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지금까지 예산 2억5천만원을 들여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부 인가에 주력했으나 올해 100억원을 집중 투자해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처리장 공사가 완료되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오수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각각 20ppm에서 10ppm으로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 환경부, '청결유지명령제' 도입

앞으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에게 청결을 유지하도

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결유지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지난 2월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청결유지명령제 실시를 위한 조례 준칙이 확정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청결유지명령제 대상행위로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토지·건물내 쓰레기를 방치해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토지·건물내에서 기구 등을 이용해 쓰레기를 무단소각하는 행위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토지·건물내에 무단투기 되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이 청결유지명령을 받고도 1개월 안에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을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청결유지명령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일단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를 처리한 뒤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물리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일부 토지 및 건물내에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청결유지명령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를 활성화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가족분뇨 악취 제거 미생물제제 개발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는 가족분뇨의 악취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제제 '에코바이오(Ecobio)'를 개발,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하기로 했다고 지난 2월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에코바이오는 국내 토착 미생물 가운데 악취 분해 효과가 큰 25종을 선발, 안정화된 분말과 섞어 가족에 먹이도록 만들

어졌다. 에코바이오를 돼지에 먹인 결과 일반 돼지보다 암모니아의 경우 24.4%, 자극성 냄새가 심한 초산(醋酸)은 18.3%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코바이오는 가축의 소화율 촉진시키는 역할도 수행해 돼지 사료에 에코 바이오 0.3%를 첨가한 결과 일반 돼지보다 체중이 14.1% 늘어났다고 축산기술연구소는 밝혔다. 축산기술연구소는 에코바이오 제조기술을 특허 출원했으며 3년동안 주유진에 4억4천만원의 기술사용료를 받고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축산기술연구소 축산환경과 김태일 연구사는 "이번에 개발한 에코바이오는 외국산과 달리 국내 토종 미생물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환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군산하수처리장, 1,700억 투자율에 준공돼**

시설용량 20만인 군산하수종말처리장이 10년간의 공사끝에 올해 말 준공됨에 따라 인근 연안의 수질개선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군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17만 생활하수가 모두 정화, 처리됨에 따라 군산연안의 수질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는 것.

시에 따르면 군산국가산업단지내 7만2천600평부지에 1일 처리용량 20만인 정화시설 차집 관로 25.1, 중계펌프장 2동 등을 건설하는 군산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 91년 착공된지 10년만 인 올해말 준공된다고 최근 밝혔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3천여만원을 들여 3개 광역시, 5개 도, 54개 시·군·구지역에 걸쳐 흐르는 낙동강 전체수계의 환경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환경지도 제작할 계획이라고 지난 2월 14일 밝혔다

총 사업비 1천726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1천436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83% 공정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으로 지난 99년 준공된 1일 10만 처리용량의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시험가동에 들어가 1일 5만8천의 하수를 정화처리하고 있고 차집관리 20.7과 중계펌프장 2동이 완료됐다.

시는 올해 290억원의 잔여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1일 10만 처리용량인 2단계 하수처리장과 번영로, 금강로, 경포천변 일대의 생활오수 차집을 위한 관로4.4 매설 공사를 마무리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총 시설용량 20만 처리규모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군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17만의 생활오수가 BOD(생물학적산소요구

량) 180ppm인 상태에서 20ppm으로 정화처리 방류 한다.

♣ **10월까지 낙동강권역 환경지도 제작**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3천여만원을 들여 3개 광역시, 5개 도, 54개 시·군·구지역에 걸쳐 흐르는 낙동강 전체수계의 환경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환경지도 제작할 계획이라고 지난 2월 14일 밝혔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지금까지 낙동강권역에 대한 종합적 환경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 기간에 낙동강 환경전반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 환경지도 제작을 만들어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및 입체적 환경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수량과 수질, 대기, 규제지역, 환경시설, 기타 등 6개분야로 나눠 환경지도에 포함될 대상범위를 선정했다. 수량분야는 강수량과 수자원, 하천현황, 댐시설 등이 포함되고 수질분야는 환경기준 달성도, 하천구간별 수질오염도,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하천수질목표 등의 자료가 입력된다.

